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7-04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임강택·홍제한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연구책임자 : 임강택(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홍제환(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KINU 정책연구시리즈 1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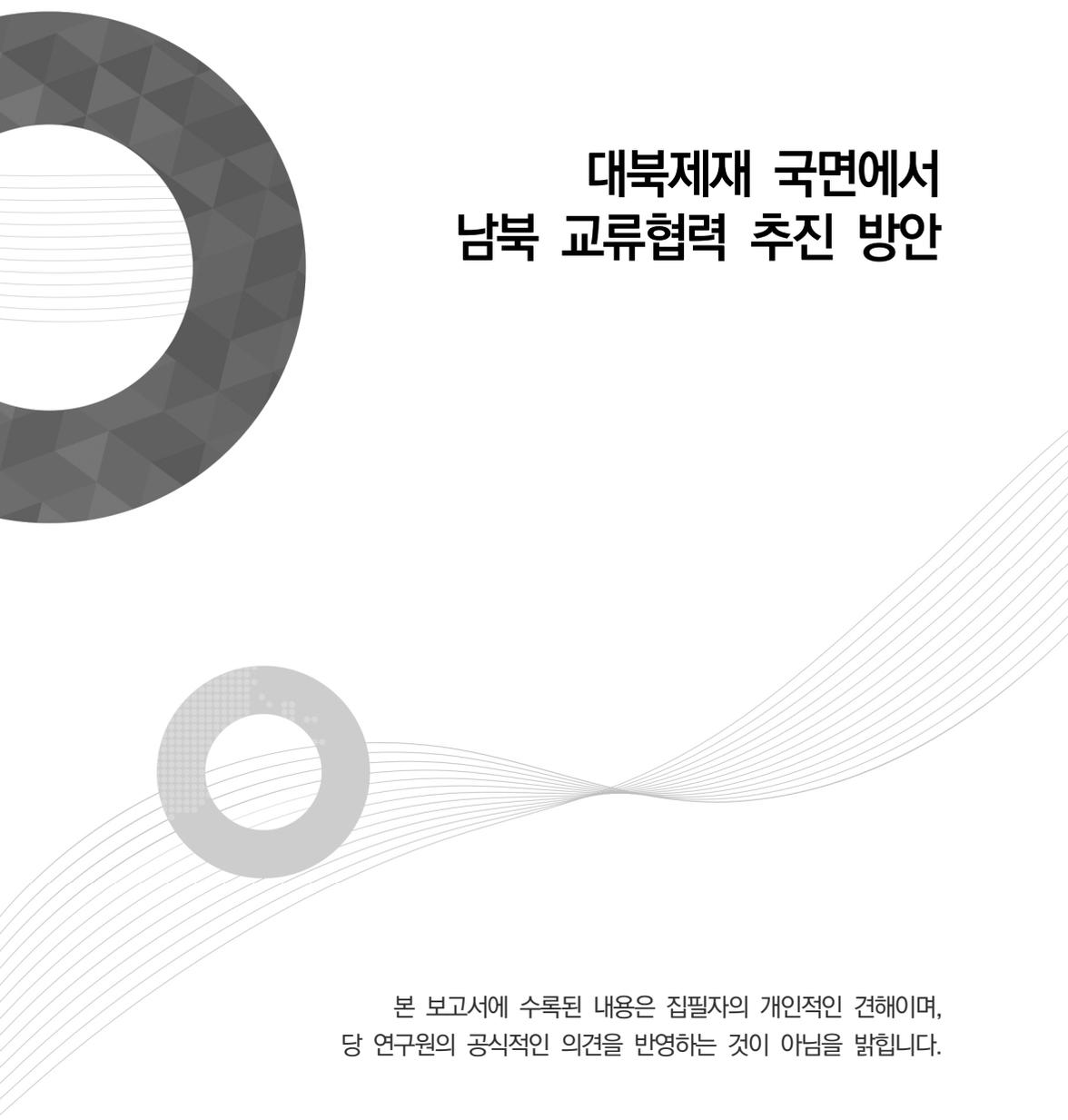
---

발행일	2017년 10월 30일
저자	임강택, 홍제환
발행인	손기웅
발행처	통일연구원
편집인	북한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FAX) 02-2023-8296
홈페이지	<a href="http://www.kinu.or.kr">http://www.kinu.or.kr</a>
기획·디자인	세일포커스 (02-2275-6894)
인쇄처	알래스카인디고 (02-2277-5553)
ISBN	978-89-8479-885-4 93340 남북 교류 협력[南北交流協力] 340.911-KDC6 / 320.9519-DDC23 CIP2017029714
가격	비매품

---

© 통일연구원, 201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02-734-6818), 사무실(02-394-0337)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차례

요약 .....	7
I. 서론 .....	9
II.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목표와 당면 과제 .....	13
1. 남북 교류협력의 비전과 목표 .....	15
2.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추진 방향 .....	15
3.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당면 과제 .....	16
III. 단계별 접근 전략: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추진 .....	19
1. 기본 방향 .....	21
2. 1단계: 남북대화 복원 가능성 탐색 .....	22
3. 2단계: 남북 당국 간 대화 통로 복구 및 대화의 재개 .....	23
4. 3단계: 남북관계 정상화와 당국 대화의 정례화 .....	24
IV. 주요 사업별 추진 방안 .....	27
1.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	29
2. 이산가족 상봉 .....	30
3. 체육교류 .....	32
4. 지자체의 교류협력 .....	33
5. 사회문화 교류협력 .....	37
6.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방문 허용 .....	39
7. 단순 물자교류와 임가공사업 .....	40

8.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현장 점검 및 당국 간 실무회담 .....	42
9. 금강산관광사업 .....	43
10.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접경지역에서의 다자협력 .....	45
11. 남북철도 연계 사업 .....	46
12. 종합: 단계별 특징과 주요 추진사업 .....	47
<b>V. 정책적 고려사항 .....</b>	<b>49</b>
1. 대북 교류협력체계 복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 .....	51
2.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	51
3. 다차원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	51
4.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	52
<b>참고문헌 .....</b>	<b>55</b>
<b>[부록] 남북 교류협력사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 및 공약 .....</b>	<b>59</b>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먼저 II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제시한 뒤, 당면 과제로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 복원, 남북대화를 위한 당국 간 공식 통로(창구) 복원,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III장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양상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는 남북대화 복원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로 설정하였으며, 2단계는 남북 당국 간 대화 통로 복구 및 대화의 재개가 이루어지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당국 간 대화가 안정적으로 정례화되는 단계로 설정한 뒤, 각각의 단계에서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어떠한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논하였다.

이어 IV장에서는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 체육교류,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별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앞서 소개한 각 추진 단계별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각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대북제재 하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 교류협력사업의 제도화 방안 마련, 다차원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대북제재,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공존, 단계적 추진, 지속가능성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two large, dark gray circular shapes, one at the top and one at the bottom, both containing a grid of small white dots. These circles are connected by a series of thin, light gray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from top to bottom.

# I. 서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핵문제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대북정책 기조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불안이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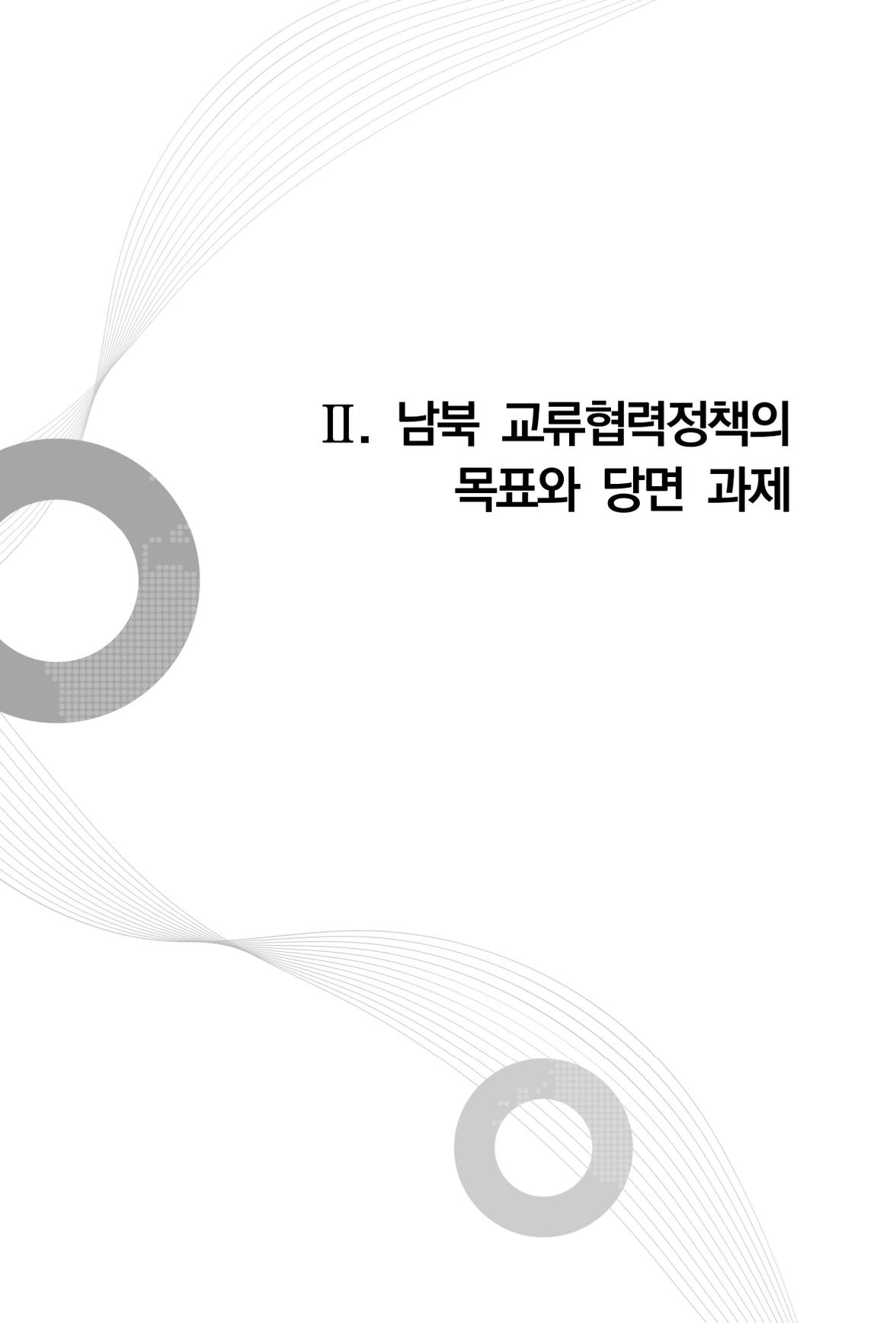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정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은 준수하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실마리를 만들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대해 아직 아무런 공식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서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인 분위기를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고, 동시에 우리 사회 내부의 우려도 적절한 수준에서 감안하면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남북한 관계개선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재개하는 문제에 접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완전하게 붕괴된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생태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또한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복원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국내외 정세변화와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현재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 레짐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자대화의 재개 등과 같은 상황이 전개될 경우

에는 제재 강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II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목표와 당면 과제에 대해서 살펴본 뒤, III장에서는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단계별 접근 전략을 제시한다. 이어 IV장에서는 주요 사업별 접근 방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features a large, dark gray ring with a white center, partially filled with a grid of small white dots. This ring is connected to a series of thin, light gray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A smaller, similar ring is positioned lower down on the right side.

## II.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목표와 당면 과제



## 1. 남북 교류협력의 비전과 목표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비전 하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목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공존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 셋째,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저성장 구조에 직면한 한국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협력을 촉진해 나감으로써 남북한이 동북아시아 교류협력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 2.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추진 방향

위에서 제시된 남북 교류협력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북 교류협력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 교류협력은 민간부문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북핵문제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지 않는 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지속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확보하도록 한다.

둘째, 기존의 남북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등에서 남북 당국이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고, 현실적 상황에 적합한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대화 및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을 다방면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교류협력이 국제사회의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취지와 항목을 준수하되,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교류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문제의 진전 여부를 고려하여 남북 교류협력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교류협력은 남북경제의 공동성장과 북한경제의 체질 개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경제 모두에 이익이 되는 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북한경제가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경제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남북 교류협력을 주변국과의 교류협력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주변국의 참여는 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변국이 참여하는 3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동북아 차원의 협력사업에 북한을 참여시키거나, 남북협력을 동북아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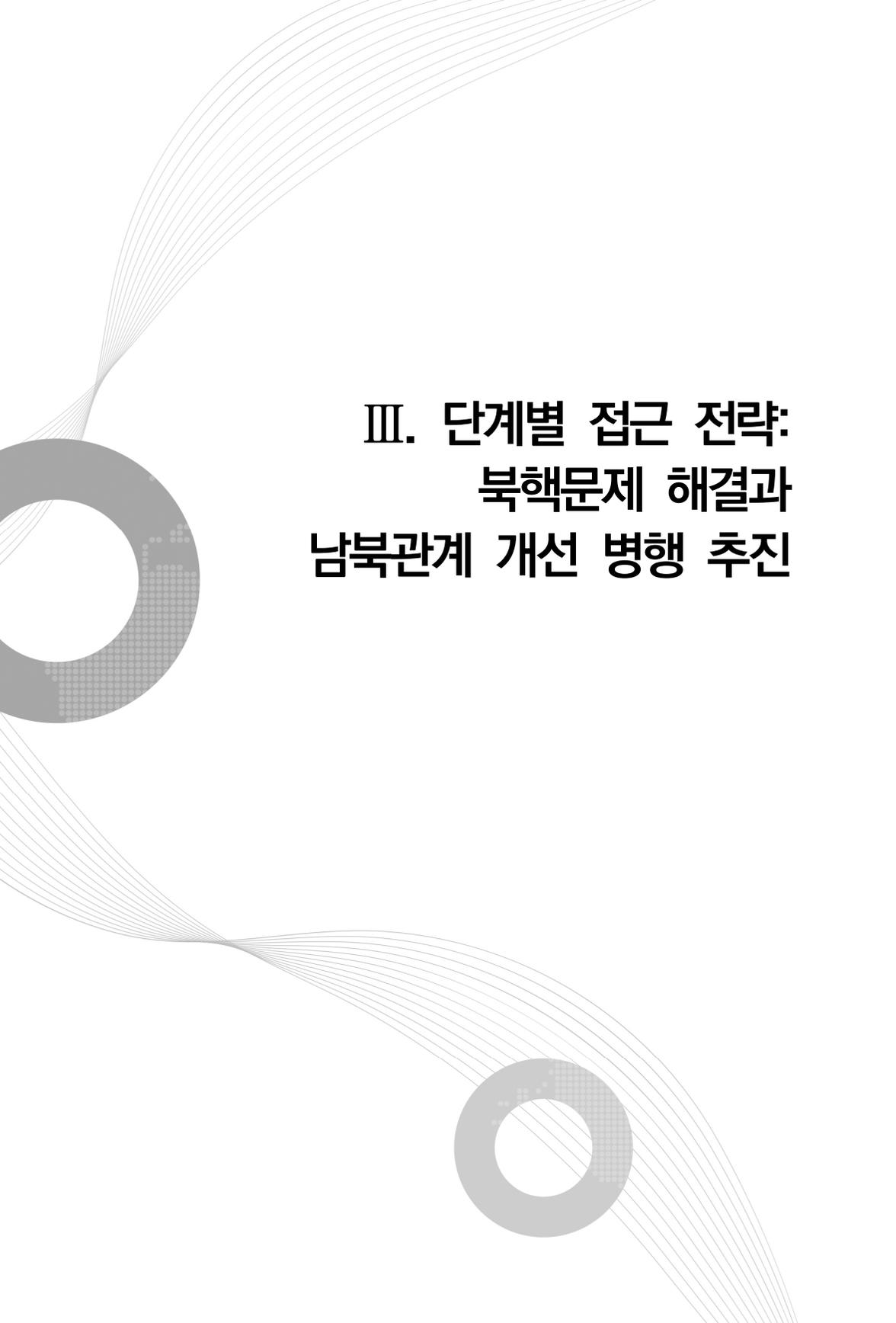
### 3. 남북 교류협력정책의 당면 과제

신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 교류협력의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 상당 기간 동안 중단되어 온 남북 교류협력이 재개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반(생태계)이 복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자율성을 지니고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이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대화를 위한 당국 간 공식적인 통로(창구)를 복원하는 일이다. 남북 당국 간 신뢰가 깨진 현 상황을 타개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관심사가 적절하게 반영된 주제와 분야에서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차적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대폭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국 간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우선적으로 판문점 직통전화 연결 등 북한 측과의 대화 수단 및 통로를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조속한 시일 내에 끌어올려야 한다. 물론 국내외 대북제재가 엄중한 상황에서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협력을 예전의 수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복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재개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age features a decorative graphic on the left side consisting of several thin, curved lines that sweep across the page. Two large, grey, circular elements are positioned on the left: one is a solid ring, and the other is a ring filled with a fine grid of small dots. The text is centered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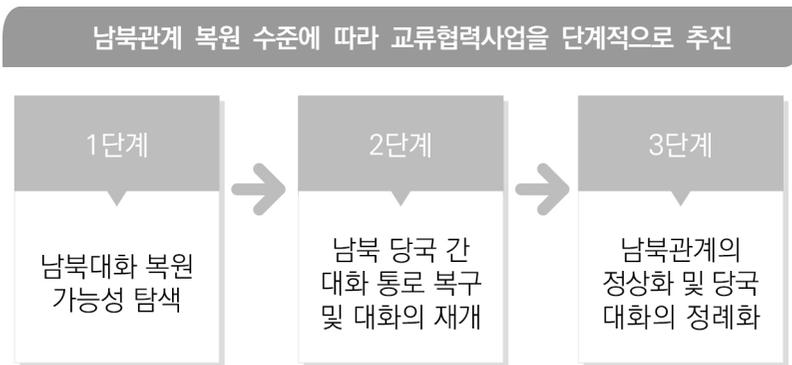
**Ⅲ. 단계별 접근 전략: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 추진**



# 1. 기본 방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서 남북 간 긴장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역대 정부에서 정부 출범 1년차의 성과가 집권 기간 전반의 남북관계를 좌우해왔다는 점<sup>1)</sup>에 주목하여, 출범 초기 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대화 국면을 조성하는 데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때 남북관계의 복원은 북핵문제 해결 양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출범 초기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04.), 기업인 수시 방북 확대, 금강산관광 개시(1998.11.) 등의 조치를 단행했던 김대중 정부나 개성공단 착공식을 거행(2003.06.)했던 노무현 정부의 경우,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김태영 합참의장이 대북 선제타격 발언(2008.03.)을 하고, 금강산관광사업을 중단(2008.07.)하였으며, 김정일의 뇌졸중(2008.08.) 이후에는 급변 사태론에 입각하여 의도적 무시 정책을 추진하였고, 박근혜 정부 역시 출범 직전 있었던 북한의 3차 핵실험(2013.02.)과 개성공단 일시 중단(2013.04.~09.)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한 바 있다.

## 2. 1단계: 남북대화 복원 가능성 탐색

이 단계는 남북대화의 복원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 대화 및 접촉 확대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역점을 두면서, 민간 차원에서 경제, 사회문화 분야를 비롯한 비정치부문의 교류와 접촉을 재개하고, 이를 토대로 단절된 남북대화의 복원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통령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하는 다양한 국제회의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류협력의 유용성을 설명하고 협조·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측에 추가적 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도적·적극적 역할을 자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는 공고하게 유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한다는 기초를 일관되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기존의 남북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실현해 나가자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도적 지원 사업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대북 접촉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거의 중단되었던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는 체육교류를 포함하여 사회문화 분야

에서도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사업이 복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공동기념 행사를 재개하여, 이를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복원의 계기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무주 WF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축사(6.24.)<sup>2)</sup>를 통해서도 남북 체육교류를 제안하였으며, G20 참석차 방문한 독일에서 행한 퓌르버 재단 초청연설(7.6.)<sup>3)</sup>을 통해서도 이산가족상봉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중단과 남북 간 접촉 및 대화 재개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7월 17일 북측에 군사회담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사회담을 제안하고 북측의 호응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이 이에 대해 아직 호응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남북 간 대화 통로가 마련될 때까지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2단계: 남북 당국 간 대화 통로 복구 및 대화의 재개

2단계는 남북 당국 간 대화 통로를 복구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단계이다.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당국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어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될 경우에는 남북대화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속성이라는 측

---

2) 문재인, "2017 무주 WFT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축사," 청와대, 2017.06.24.,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0>> (검색일: 2017.06.28.).

3) 문재인, "퓌르버 재단 초청 연설," 청와대, 2017.07.06.,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57>> (검색일: 2017.07.07.).

면에서는 북한의 관심분야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합의도출이 쉬운 것부터 다룸으로써 대화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여기에 대화의 영역과 주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대화의 흐름이 쉽게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사업 복원 및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적인 당국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민간과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의 복원 및 활성화를 추진하며, 아울러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경제 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류협력사업들의 재개 가능성을 탐색하는 작업도 병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대북사업장 현장점검을 위해 우리 기업의 실무진이 북한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재개와 관련해서 시설 점검을 위한 기업 측의 방북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단계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변경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다자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연변 지역 조선족을 중개자로 활용하여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다양한 문화·학술행사를 기획·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 대북사업가와의 협력을 통한 경제 교류협력사업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3단계: 남북관계 정상화와 당국 대화의 정례화

3단계는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당국 간 대화가 안정적으로 정례화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그간의 당국 간 대화 복원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당국 간 대화 채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긴장 완화와 협력 확대를 위한 당국 대화를 정례화하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지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북한주민 접촉과 북한방문 및 여행 자유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 및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단체의 방북이나 북한주민 접촉은 신고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초기 국면에는 북한주민 접촉과 북한 방문을 자율화하고, 이후 남북 사이의 신뢰구축 수준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정도를 고려하여 북한 여행의 자유화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단순물자 교류를 허용하고 대북 투자협력사업의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는 선에서 단순물자 교류를 허용하고, 중단된 기존의 대북투자사업 재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개성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개 방안에 대해 남북 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경협을 국제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up>4)</sup> 남북경협에 주변국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자본이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성과 지속성, 발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제 NGO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SOC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4) 남북경협의 국제화란 ① 법·제도의 국제화(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4대 경협합의서 등의 실질적 이행과 담보, 근로자의 인권과 임금지급의 투명성 제고 등)를 통한 기업 활동 보장 ② 행정·서비스(3통문제 해결, 시장경제체제 및 비즈니스 마인드 제고, 인사·노무관리의 자율성 보장, 남북 간 CEFA 체결 및 역외가공지역 인정 등 국제경쟁력 제고)의 국제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③ 자본의 국제화를 통해 외국기업인들에게 투자 매력 제공 등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 IV. 주요 사업별 추진 방안





# 1.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

## 가. 필요성

인도적 사안은 정치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따라서 대북제재 하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즉, 북한의 취약 계층이나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2017.04.)에도 북한 취약계층 76만여 명에게 식량을 지원한 바 있는데,<sup>5)</sup> 이처럼 취약계층과 이재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 모색단계부터 민간단체들이 주도적·자율적으로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단계적 추진방안<sup>6)</sup>

### ■ 1단계 추진사업

-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식량, 보건의료 등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추진
- 국제기구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간접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민간단체의 독자적 지원을 병행 추진

5) “WFP, 4월 북한 취약계층 76만 명 식량 지원,” 『미국의 소리 방송(VOA)』, 2017.06.02., <<https://www.voakorea.com/a/3882881.html>> (검색일: 2017.07.05.).

6) 이하에서 언급하는 추진 단계는 앞 장, ‘III. 단계별 접근 전략’에서 제시된 1~3 단계를 지칭한다.

## ■ 2단계 추진사업

- 소규모 인도적 지원과 병행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모색
- 홍수나 가뭄, 질병, 붕괴사고 등 재해·재난 시에는 민간단체의 대북 긴급지원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대응

## ■ 3단계 추진사업

-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분배의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정부 차원에서의 쌀 지원은 당분간 자제
- 북한에 대한 긴급구호성 사업과 재해 복구, 그리고 개발협력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북 개발지원시스템 구축

## 2. 이산가족 상봉<sup>7)</sup>

### 가. 필요성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2017년 7월 말 기준으로 13만 1,2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생존자는 6만여 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상당수의 이산가족이 끝내 가족 상봉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것이다. 게다가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3%를 넘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8)</sup>

7)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이슈에는 전면적인 생사확인 및 자유로운 서신교환, 상시적인 상봉행사와 재상봉 허용, 자유로운 상호방문 허용뿐만 아니라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도 포함된다.

8)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시스템, “2017.7월 이산가족 등록 현황,” 2017.08.11.,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view.do?id=233&mid=SM00000129&limit=10&eqDataDiv=REQUEST&eqIndex=0&page=1>> (검색일: 2017.08.11.).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난 G20 정상회담 참석 차 독일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코르비재단 초청연설(7.6.)에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것을 북한 측에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한다”고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이 끝내 화답하지 않았으나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 측에 호응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 나. 단계적 추진 방안

### ■ 1단계 추진사업

- 우선적으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논의할 남북 적십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주력
-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북한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인도적 지원과 같은 인도적 사안끼리 교환하는 방법과 함께 다른 사안과 비대칭적으로 교환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

### ■ 2~3단계 추진사업

- 일회성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같은 초보적 수준에서 벗어나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를 포함하여 이산가족 상봉문제의 해결 과정을 몇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 모색

### 3. 체육교류

#### 가. 필요성과 진행 상황

세계사를 되돌아보면, 스포츠 교류가 공정한 경쟁과 스포츠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정치적·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고 국가 사이의 협력과 평화를 촉진해온 사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수많은 곡절을 거쳐 온 남북관계 속에서도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서 스포츠를 통해 남과 북이 대화의 물꼬를 튼 사례가 있으며, 그동안 남북관계가 대립과 마찰로 경색되어 있을 때에도 체육은 남북 사이의 교류가 가능했던 분야였다. 따라서 북한의 거둬들인 도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속에 철저히 단절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체육 분야의 남북교류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무주에서 개최된 WF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식에서 축사를 통해 북한 ITF 시범단 참석의 의미를 평가하면서, 새 정부의 첫 번째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남북단일팀 구성, 남북선수단 동시입장, 북한 응원단 참가 등을 제안하였다. 또 우리 측에서는 북한 시범단과 함께 방한한 북한 체육계 인사들과의 회담을 통해서 북한 측에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확인했으며, 남북 체육교류협정의 체결, 한반도 체육사 공동조사, '경평축구'의 복원 등을 다양하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체육강국건설'을 국가목표로 강조하면서 체육분야를 체제 결속과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명분이 마련된다면 우리 측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나. 단계적 추진방안

### ■ 1~2단계 추진사업

- 일차적인 과제는 체육 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인 바, 우선적으로 아시안컵 역도선수권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도록 하는 방안 추진

### ■ 3단계 추진사업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공동입장부터 시작하여 북한 응원단의 방한과 단일팀 구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 4. 지자체의 교류협력

### 가. 필요성과 최근 현황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 남북교류의 법적·제도적 위상이 여전히 분명하지 않으며, 지자체들 간에 남북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도 큰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정치적 변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민간단체에 비해서는 재정력과 사업기획력이 월등하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대부분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간의 융통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북한의 수용력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정부 들어와서 지자체의 남북교류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자치단체들이 자체 남북 교류협력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지자체들까지 남북교류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기존에 남북교류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들도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준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지자체 남북교류의 현실과 과제

과거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인도적 지원과 농업협력 등 일부 분야에 사업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사업 대상지역이 평양 및 북한의 서남부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자체의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으나, 제도적 측면에서 지자체 남북교류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남북교류에 있어 지자체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즉, 중앙정부 남북 교류협력기금 지원, 대북협상 측면에서의 지원, 북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남북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다. 사업영역별 추진 방안

### (1)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대한 국내 인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단체들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가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북지원이 갖는 국내적 효과도 고려하여,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제주도의 북한 감귤지원사업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는데, 이는 이 사업이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이다.

- 추진 단계: 지자체의 인도적 지원사업은 1단계에서부터 추진 가능

### (2) 개발협력사업

과거 지자체들은 협동농장 단위의 시범적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평양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경기도가 추진한 사업, 인근인 강남군 장교리에서 경상남도가 추진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하게, 북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 혹은 군 단위 협동농장이나 도시 지역의 특정 기업소 정도의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간 교류협력사업을 지자체들이 분담하여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측 협력단위의 자생력이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을 남한 및 외부 시장과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추진 단계: 개발협력사업은 1~2단계에서는 먼저 북측과 사업 추진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3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 (3) 접경지역의 상생협력사업

국토가 크지 않은 한반도의 특성상, 접경지역에서 남북협력이 불가피한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인천과 경기도가 추진한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강원도가 추진한 산림병충해 공동방제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초국경 질병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은 말라리아 공동방역 외에도,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은 물론이고 각종 전염성 질병에 대한 공동대처로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초국경 질병은 질병관리시스템이 취약한 북한 내부에서 질병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확산될 경우 남한 지역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협력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강, 임진강 등 남북공동수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홍수기 재난대처와 갈수기 수량배분 문제 등도 남북협력이 불가피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 추진 단계: 1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 (4) 기타 추진 사업

이외에도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간·농촌 간의 지역 교류, 스포츠, 사회문화 교류 등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추진 단계: 2~3단계에서 추진

## 5. 사회문화 교류협력

### 가. 필요성과 주요 특징

사회문화 교류는 역사·문화 분야는 물론이고, 언론 및 방송, 청소년, 종교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류를 포괄한다. 따라서 사회문화 교류는 중장기적으로 남북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는 또한 그 속성상 정치·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다. 과거 개성 만월대 발굴 사업이나, 남북 역사학자 교류 등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들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사회문화 교류는 북측의 수용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어서, 사업의 성사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역사·문화 분야 등 학술 교류의 경우, 장소의 제약에서 벗어나 제3국에서 교류하는 것도 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문화 교류에는 다양한 민간단체들이 참여하여 왔다. 그러나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다보니,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전체적인 전략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산발적·분절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단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결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은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측면도 있다. 예컨대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한 용어나 규격의 표준화 사업 등, 통일 이후 혹은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노력과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나. 단계적 추진 방안

### ■ 2단계 추진사업

- 민간단체와 연대하여 사회문화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복측과의 협의 진행

### ■ 3단계 추진사업

- 민간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 당국 간 ‘(가칭) 문화통합을 위한 교류협력협정’ 체결을 추진 - 예컨대, 유럽통합은 ‘석탄철강공동체’라는 경제적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지만, 정작 통합의 범위가 결정되는 데는 무형의 ‘유럽적인 것’에 대한 합의가 작용하였음. 실제로 유럽공동체(EC)를 유럽연합(EU)으로 개편한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128조는<sup>9)</sup> 유럽연합의 문화통합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9) 「마스트리히트 조약」 128조: 유럽연합의 문화통합 정책의 방향

- 공동체는 국가적이고 지역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동의 문화유산을 강조함으로써 회원국의 문화유산을 꽃피우는 데에 기여한다.
- 공동체는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권장하고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회원국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완한다.
  - 유럽민족들의 문화와 역사의 보급 그리고 그에 대한 지식의 증대
  - 유럽 차원의 중요한 문화유산 보존과 보호
  - 비상업적 문화교류
  - 방송 분야를 포함한 예술과 문화 창작
- 공동체와 회원국은 제3국과 문화 분야 관련 국제기구 그리고 특히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의 협력을 권장한다.

## 6.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방문 허용

### 가. 필요성

일반인들이 북한주민들과 접촉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복원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측과의 접촉과 방문을 통제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는 대신, 북측과의 협의를 자제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목록을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의 대북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주민들을 만나거나 북한을 방문할 경우에는 간단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나. 단계적 추진방안

#### ■ 1단계 추진방안

- 현 단계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의료품 전달 등 인도적 차원의 남북 간 주민접촉이 우선 고려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학술 및 종교차원의 인적 교류를 추진
- 국제기구나 국제 NGO를 통한 간접적인 대북접촉이나 방문을 통해서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안을 논의

#### ■ 2단계 추진방안

- 북한주민 접촉과 북한 방문의 범위를 대폭 확대
-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의 재개 준비를 위한 접촉 및 북한의 현장 방문 허용 요청
  - 관련 부처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의 재개를 위한 실무적 검토작업에 착수

-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우리 내부의 기반 정비작업을 추진

### ■ 3단계 추진방안

- 북한지역에 대한 여행을 전면적으로 허용
- 북한 내외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람과 기관의 목록 (예를 들면 대북제재 대상 등)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

## 7. 단순 물자교류와 임가공사업<sup>10)</sup>

### 가. 필요성

경제협력 분야의 경우, 우선적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단순 물자교류 및 임가공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의 조건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인프라 개발 등 정부 간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경제 협력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 등 추진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조심스럽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물자교류와 임가공 사업은 '5.24 조치'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이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점진적인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 물자교류와 임가공 사업 중에서는 후자를 우선적으로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먼저 물자교류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이

10) 여기에서 단순 물자교류는, 의약품이나 교육, 보육 등 인도적 목적에 연관된 품목이나 의류 등 기초 생필품의 대북 반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반입은 지하자원보다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추진함. 또한, 임가공사업은 당분간 설비반출형 위탁가공보다는 단순한 임가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품목도 의류 등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시범사업부터 추진한 뒤, 점차 확대함.

크다. 과거 남북한 간의 물자교류는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반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다. 남한산 제품의 시장 판매를 꺼리는 북한 당국의 태도나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하자원이나 농수산물의 수출에 대한 통제권이 군이나 당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 물자교류를 통한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에 대해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물자교류를 통해서 북한에서 반입할 수 있는 주요 품목인 지하자원의 경우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임가공 사업의 경우, 재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설비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임가공의 경우 북한에 임가공비만 지불되기 때문에 단순 물자교류보다 북한에 지불되는 외화의 규모가 작을 수 있다. 임가공 사업은 북한의 산업설비의 가동률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와 함께 남한의 관련 원부자재 공급 기업의 수요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북한 시장에 공급되어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 나. 단계별 추진사업

### ■ 2단계 추진사업

- 물자교류와 임가공 사업 협의를 위한 대북 접촉을 제한적으로 허용
- 임가공 사업의 경우 과거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다가 5.24 조치에 의해서 중단되었거나 중국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남측 사업가 등의 대북 접촉 허용
- 단순 물자교류의 경우 농수산물의 반입이나 생필품의 대북 반출 등을 위한 접촉 허용

### ■ 3단계 추진사업

- 일정 규모 이하의 물자교류나 신규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임가공, 그리고 중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던 임가공 사업의 공식적 허용 등을 통하여 5.24 조치의 예외 영역을 확장

## 8.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현장 점검 및 당국 간 실무회담

### 가. 필요성과 접근 방향

개성공단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등 국내외 여건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 시점에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투자업체나 남북한 당국 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따라서 당분간은 당장 개성공단을 재개하려 하기보다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한 한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나. 단계별 추진방안

#### ■ 2단계 추진사업

- 개성공단 현장 점검을 위한 실무자 협의
- 입주사업자와 정부관계자들의 현장 점검 진행을 통해서 설비나 자재 등의 상황 파악
- 이와 함께, 당국 간 공식적인 협의를 위한 비공식적인 협의도 진행

#### ■ 3단계 추진사업

- 국내외의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협의 본격 진행

- 북한 핵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남북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당국 간 협의 추진
- 당국 간 협의회가 재개되면 개성공단의 단순한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기준과 규범에 따른 운영을 위한 협의도 추진

## 9. 금강산관광사업

### 가. 필요성과 접근 방향

금강산관광의 재개 여부는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과 함께, 향후 남북 간 상호 신뢰의 회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강산 사업 재개는 '5.24 조치'나 북핵 실험 이전에 행해진 경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대 전제 조건 해결보다는 한·미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관광대가의 WMD 전용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산 사업 재개는 핵문제 해결을 비롯한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과 우리 정부의 재개 의지, 그리고 국제제재 적용 여부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금강산 사업 역시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재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개성공단 등 여타 경협사업과 동일하게 일단은 재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나. 단계적 추진방안

### ■ 2단계 추진 사업

- 관련 기업의 시설점검 방문 허용, 북한과의 관광재개를 위한 비공식적 대화 추진
-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해서 금강산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재개 가능성 검토
- 관광대가 지급방식 변경문제 검토
  - 예를 들면 관광대가의 현금 지급에 대해선 일정비율(예컨대 차관 8,000만 달러를 10%씩 10년 상환)<sup>11)</sup>에 한해 북한의 미상환 채무와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국제제재 국면이라는 일시적 상황임을 설명)

### ■ 3단계 추진사업

- 국제사회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북한 측과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협상 진행
- 북한과 금강산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동해안 남북관광 벨트 조성 방안 등 중장기 협력방안도 협의
  -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나 북한 역점 지역(원산~마식령) 관광사업 및 남북관광 연계(철원~금강산) 등의 중장기 계획 등도 협의

11) 중단 이전에 북한의 현금 수입은 관광객 1인당 약 100달러(관광대가 + 북한 서커스 관람 + 북한 물품 구입 등)로 추정됨. 따라서 차관 8,000만 달러의 10%씩을 채무 상환으로 대체할 경우, 관광 대가의 약 20%(관광객 40만 명 가정)는 현물 방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임.

## 10.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접경지역에서의 다자협력

### 가. 필요성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간 교류협력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과의 접경지역의 중국과 러시아 지방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에 각별한 관심과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들과의 협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한반도 접경지역에서의 국제협력으로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과 중국 훈춘 주변지역에서의 남·북·중·러 다자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 나. 단계적 추진방안

#### ■ 1~2단계 추진사업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에서의 한국공단 조성 방안을 러시아 측과 협의, 우선적으로는 한·러 협력 시범공단 추진

#### ■ 3단계 추진사업

- 러시아 한국공단 조성사업을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연계 추진
- 중국 훈춘지역과 러시아 하산지역에 생태환경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남·북·중·러 다자협력사업으로 추진

## 11. 남북철도 연계 사업

### 가. 필요성

과거 3대 남북경협사업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 사업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나진항 제3부두에서 하산까지 철도(54km)를 개보수하고, 화물터미널 건설과 화물열차 확보를 통해, 나진항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계하는 물류사업이다. 이 사업은 '부산/동해항만-나진 간 해상 수송 후 TSR 경유 물류수송'으로 구성된 'SEA & RAIL 形'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운송사업이며, 향후 상업적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은 북한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몽골의 '초원의 길'과의 연계 차원에서 새로운 접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 나. 단계적 추진방안

#### ■ 2단계 추진사업

-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은 한국이 러시아 지분을 인수하는 간접참여방식으로, 사업 재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추진
- MOU에 따른 나진항 실사 및 기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기존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 컨소시엄과 정부 참여방식 및 투자재원 마련 방식 검토

#### ■ 3단계 추진사업

- 러시아 측과 사업의 권리, 투자비 및 지분 협상
- 남·북·러 간 운임 및 정시성 보장 협의
- 한국 측 참여물류기업 및 선사 최종선정 등

## 12. 종합: 단계별 특징과 주요 추진사업

### ■ 1단계 주요 추진사업

- 첫째, 경제 분야 교류협력보다는 인도적 지원 사업 및 사회문화 분야에서 교류협력에 초점
- 둘째,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민간단체, 지자체, 국제기구 등의 주도로 교류협력사업 추진

분야	1단계 주요 추진사업
경제	- 러시아 극동 지역 한국공단 조성 방안 협의
사회 문화	-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 이산가족 상봉 - 지자체를 통한 접경지역 상생협력사업 - 학술 및 종교 차원의 인적 교류 - 체육 분야 교류

### ■ 2단계 주요 추진사업

- 첫째, 경제 분야 교류협력사업 재개 가능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
- 둘째, 민간단체, 지자체와 함께 정부도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복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경주

분야	2단계 주요 추진사업
경제	-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의 재개 준비를 위한 접촉 및 실무적 검토 작업 착수 - 물자교류와 임가공 사업 협의를 위한 대북 접촉 제한적 허용 (5.24 조치의 점진적 완화) -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재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
사회 문화	- 북한주민 접촉 및 북한 방문의 범위 대폭 확대 - 종합적인 형태의 개발협력사업 추진 방안 모색 - 재해·재난 발생 시 대북 긴급지원 - 이산가족 상봉문제의 근본적 해결 모색 - 지자체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사업 전개 - 인적교류 확대 위한 우리 내부 기반 정비작업

### ■ 3단계 주요 추진사업

- 첫째,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 둘째,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정리화 및 체계화 추진

분야	3단계 주요 추진사업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4 조치의 예외 영역 확장</li> <li>- 국내외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재개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운영을 위한 당국 간 협의 본격화</li> <li>- 러시아 한국공단 조성사업과 '나진-하산 프로젝트' 연계</li> </ul>
사회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배의 투명성 보장을 전제로 대북 식량지원 전향적 검토</li> <li>- 대북개발지원시스템 구축</li> <li>- 지자체의 인도적 지원사업 및 개발협력사업 본격화</li> <li>- 북한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li> <li>- 북한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협상 및 북한 지역 여행 전면 허용</li> <li>-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관광 관련 중장기 협력방안 협의</li> <li>- 극동 지역 생태환경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남·북·중·러 다자협력사업 형태로 추진</li> <li>- 남북 당국 간 '(가칭)문화통합을 위한 교류협력협정' 체결</li> </ul>

## V. 정책적 고려사항





## 1. 대북 교류협력체계 복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대 형성

대북 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우호적인 국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이 대북제재 하에서의 교류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은 또한 대북 교류협력 기초 및 방향성을 수립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아울러 대북 교류협력 복원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책집단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려는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교류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 대북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의 지도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3. 다차원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민간 차원 교류협력의 자율성을 보장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 및 전문가집단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민관거버넌스는 경제, 사회 문화, 보건의료 등 주요 영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남북 사이에서도 민간단체들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종교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들의 체계적인 남북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과다경쟁 및 중복 사업을 조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할 필요도 있다. 주요 주변국들의 대북 교류협력 관련 기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주요 국제기구들과 중요 사업영역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4. 국제사회 및 주변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우선 미국 측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 측에 대북제재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시키는 노력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그 대상에는 미국 당국자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그룹이나 의회 지도자들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1.5트랙의 접촉면을 보다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기구 및 국제 NGO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지원사업 및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와 주요 현안에 대해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현재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 NGO와의 협력관계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측을 중재자로 활용하여 북한 측과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선족과 연변지역이 지니고 있는 가교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선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겠다.



## 참고문헌

『마스트리히트 조약』

『미국의소리방송(VOA)』 <www.voakorea.com>.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https://reunion.unikorea.go.kr>.

청와대 <www1.president.go.kr>

## 관련 자료 목록

강영식.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평가와 발전방안.” 『수은북한경제』. 2017년 여름호.

김경술. 『북한 민생용 에너지 문제 해결방안 연구』.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북한 에너지 소비 행태 조사분석 연구: 가정/상업/공공기타부문』.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김동선.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추진 기조와 과제.” 『KDI북한경제리뷰』. 제19권 제6호, 2017.

김병로·김병연·김윤애·김정용·김천식·박명규·송영훈·이효원·정근식·정은미·홍순직. 『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 프로젝트』. 과천: 진인진, 2015.

김상태. “금강산·원산 국제관광 개발 계획과 남북 협력 방안.” 『통일경제』. 2015년 제2호, 2015.

김석진·홍제환. 『북한 민생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6.

김영훈·석현덕·임수경·윤영석. 『임농복합단지 배후 농촌지역 개발협력 방안』. 서울: 통일준비위원회(연구용역 보고서), 2014.

나희승·박정준·윤혁진·최찬용·박영·박철민·문형석·김경태·조용현·윤재찬·김병우·이호·서광석·정성봉·정예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를 위한 화물운송시스템 및 환적최적화 기반기술 연구 최종보고서』. 세종: 국토교통부, 2015.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 20년 백서』. 서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2015.
- 문경연. “북한 인력 경제교육을 위한 KSP 등 개발협력 패키지 활용방안.” 『수은북한경제』. 2014년 여름호.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남북교류협력의 재조명 - 분야별 진단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2015.
- 박명규. “남북관계의 동력 회복을 위한 정책 혁신의 구상.” 『통일경제』. 2016년 제1호, 2016.
- 박영정·오양열·김성수·신준영·정희섭.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2013.
- 박훈민. 『분단국가의 철도교통 협력법제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2015.
- 성기영. “남북러·남북중 삼각협력을 통한 대북경협 활성화 방안.” 『수은북한경제』. 2014년 가을호.
- 신희영·이혜원·안경수·안형순·임아영·전지은·최소영. 『통일의료 -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 안병민. “유라시아 시대의 동북아 협력과 북한 개발 전망 - 교통·물류를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14년 봄호, 2014.
- 양문수. “남북경협의 평가와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7년 여름호, 2017.
- 양문수·이석기·김석진. 『북한의 경제특구·개발구 지원방안』.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엄구호. “러시아 극동에서 남·북·러 3각 농업협력 방안.” 『수은북한경제』. 2015년 여름호.
- 유승호·박지연. “남북경협 재개시 금융결제방안 연구.” 『수은북한경제』. 2017년 여름호.
- 이석기·김석진·정근주. 『북한의 산업 발전 잠재력과 남북협력 과제: 경제특구, 경공업 및 IT산업을 중심으로』. 서울: 산업연구원, 2013.
- 이유진. “‘조선교류’(Chosun Exchange), 북한의 시장경제 인재를 양성하다.” 『KoFC 북한개발』. 1호, 2013.
- 이운진·김아름·강일규·손기웅·임준범. 『육아지원분야의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2015.
- 이해정. “남북한 사회문화협력의 특징과 과제.” 『통일경제』. 2015년 제1호, 2015.

- 이현주·이백진·어은주·김원배·송쿠이.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임강택·권태진.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협력 방안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임강택·이강우.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임예준·이규창.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근간.
- 임을출. “남북경협 방향성과 다자협력 과제.” 『통일경제』. 2016년 제1호, 2016.
- 전병곤·임강택·신종호·김갑식·배종렬. 『북한 접경지역에서의 남·북·중 협력방향 모색(종합요약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최용환.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쟁점과 과제.” 『수은북한경제』. 2015년 겨울호, 2015.



# [부록] 남북 교류협력사업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발언 및 공약

## 1. 대통령 후보 시절 주요 발언 및 공약

### 가. 대선 1차 TV토론(2017-04-13)

“개성공단 원래 합의가 1단계, 2단계, 3단계 있다. 3단계까지 가면 2,000만 평이다. 그 가운데 공단 부지는 600만 평이다. 나머지는 배후 부지, 개성시내까지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거기 입주하는 기업은 저임금 찾아서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갔던 기업들이 북한 임금이 더 저렴해서 개성으로 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개성공단이 이번에 중단될 때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는데, 국내에 거기 납품하는 협력업체가 5,000개였다. 그래서 그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우리 내에도 무려 12만 5,000명이 일자리 잃었던 통계 자료가 있다. 보시고 말씀하시라.”

### 나. 대선 2차 TV토론(2017-04-19)

“(개성공단 2,000만 평을 개발하면) 우리 기업들이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그곳에 진출한 업체는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게 되지만, 거기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남한 내 많은 협력업체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 마련하는 것이다.”

### 다. 미국 시사주간지 *Time*지와 인터뷰(2017-04-19)

“통일 비용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남북 경협을 통해 경제 통일을 법적 또는 정치적 통일보다 먼저 이루는 것이다. … 우리는 경제 협력

에 대한 단계별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경제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온전한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 ‘튼튼한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문재인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2017-04-23)

“국민여러분! 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저 문재인은 유능한 안보대통령이자 통일을 준비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다음 세 가지 차원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통일입니다. ... 남북 간 갈등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수자원 공동이용으로 임진강, 한탄강 주변의 홍수 피해를 막겠습니다. 산림자원 공동이용으로 솔잎혹파리로 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해양자원 공동이용으로 서해안,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막겠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례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곧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북한선수단의 참가와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응원단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북 간 협력은 중앙정부에서 독점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한 여러 단위에서 남북협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간영역에서의 참여뿐 아니라 지역별, 도시별 교류관계를 맺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기업과 사회단체들도 북한과 상응한 영역에서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남북이 함께 잘사는 경제통일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기업 87%가 통일이 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할 것이라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북한을 새로운 성장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통일에 얽매일 것이 아닙니다.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숨에 8천만 시장이 형성됩니다. 한반도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 높아집니다. 또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2017년~2050년 동안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합니다. 매년 5만 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입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은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2의 경제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남북경제협력은 생산공동체, 소비공동체, 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의 기적'입니다.

#### 마. 방송기자클럽 토론(2017-04-27)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하고 당초 구상대로 2·3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도 당연히 재개돼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적어도 북한하고 대화 국면은 조성돼야만 가능한 것이죠. 대화 국면이 조성 안된다면 재개 자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개를 위한 대화 자체가 안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북한이 핵동결하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핵폐기 협상테이블을 한다면 그 단계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바.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으로 우리 경제에 신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구축
    -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한 뒤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를 중장기적으로 건설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 건설
    -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 도시와 1일 생활권 구축
  - 동해·DMZ 환경·관광벨트를 중장기적으로 조성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를 구축
    -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한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점진적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북한의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을 추진
  - 시장을 기초로 남북경제통합을 발전시키는 경제통일을 우선 추진
  - 시장통합을 바탕으로 생활공동체도 형성하여 통일의 기반을 구축
  -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통한 ‘작은 통일’ 실현
    -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통합적이고 생활밀착형으로 개선
  
-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
    - 국제사회와의 공조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북한당국에게 정책 및 제도 변화 촉구

-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사회권 보호·증진
  -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추진
  - 이산가족 신청자 전원 상봉 추진
    - 남북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상봉 신청한 이산가족 약 6만 명 전원에 대해 전체 상봉을 목표로 북한에 대한 병원 건립 등 인도적 지원과 교환
    - 이산가족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시 상봉, 제2면회소 건립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
  - 국군포로·납북자는 송환을 포함하여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다양한 해결책 마련
    - 국군포로·납북자 고령화를 고려하여 유해 송환 등 사후정책 병행 추진
-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로 북한 변화와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을 마련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체육교류 재개
    - 문화예술체육교류 확대는 당국 간 정치·군사 대화가 궤도에 오른 뒤 본격 추진
  - 남북 접경지역 발전 방안 모색
    -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로 DMZ 및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동으로 협의 및 해결
    - ‘통일경제 특구법’ 제정 추진

## 2. 대통령 취임 이후 주요 발언

### 가. 제12회 제주포럼 개최식 영상축사(2017-06-01)

“전쟁위협이 사라진 한반도에 경제가 꽃피우게 하겠습니다. 남북이 아우르는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이 만든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켜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꾸는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에 항구적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나.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2017-06-15)

“정부는 정부대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대화의 재개를 모색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에서 교류와 협력의 불씨가 살아나도록 돕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상상력이 한반도 북쪽을 넘어 유라시아까지 뻗어가도록 돕겠습니다.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로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변영의 길이 지속되게끔 하겠습니다.”

### 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축사(2017-06-24)

“또한, 이번 대회에 이어 올해 9월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 대회에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의 답방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방이 꼭 성사되어 한반도 평화의 큰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 저는 평화를 만들어 온 스포츠의 힘을 믿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새 정부의 첫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이뤄진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

저는 태권도에서 이뤄낸 이번 성과가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인류화합과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북선수단 동시입장으로 세계인의 박수갈채를 받았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의 감동을 다시 느껴보고 싶습니다. 북한 응원단도 참가하여 남북 화해의 전기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 라. 한·미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2017-06-28)

“한국의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출구로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핵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우리 정부의 구상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경제인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기대합니다.”

#### 마. 바흐 IOC 위원장 접견(2017-07-0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만약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면 올림픽 정신의 고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세계의 평화, 그리고 인류 화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문 대통령은 “또 IOC가 북한의 참가의 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대회조직위원회와 강원도도 북한의 참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 측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 “북한의 참가는 그 자체로 대회의 붐업과 성공적 개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 뿐 아니라 분단으로 상처받은 한국민에게 치유를 주는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평창의 성공에 대해서 IOC와 동반자 관계이고 성공을 위해서 북한의 참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으니 함께 노력해 가자.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바. 코르버 재단 초청 연설(2017-07-06)

“우리는 이미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과 북은 두 선언을 통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 민족임을 천명했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분야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협력사업을 통해 남북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자고 약속했습니다. 남과 북이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 맺은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절실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넷째,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협력은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입니다.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0.4 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세계는 평화의 경제, 공동번영의 새로운 경제모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비정치적 교류협력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의 교류협력사업은 한반도 모든 구성원의 고통을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는 과정이자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남북한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고향을 잃고 헤어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60년 넘게 치유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과 북 정부 모두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분단으로 남북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도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의 하천이 범람하면 남한의 주민들이 수해를 입게 됩니다. 감염 병이나 산림 병충해, 산불은 남북한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북이 공동대응하는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당국 간 교류에 앞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동질성 회복에 공헌해 왔습니다. 민간교류의 확대는 꼭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교류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북한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주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도적인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합니다.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10.4 정상선언' 10주년입니다. 또한 10월 4일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입니다. 남과 북은 10.4 선언에서 흘려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민족적 의미가 있는 두 기념일이 겹치는 이 날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한다면 남북이 기존 합의를 함께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한 걸음 더 나갈 용의가 있다면, 이번 이산가족 상봉에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단독일의 이산가족들은 서신왕

래와 전화는 물론 상호방문과 이주까지 허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 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습니다. 북한의 호응을 바라며,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 개최를 희망합니다.

둘째,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100km 거리에 있는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2년 후 2020년엔 하계 올림픽이 동경에서, 2022년엔 북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 이어지는 이 소중한 축제들을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만들 것을 북한에 제안합니다. 스포츠에는 마음과 마음을 잇는 힘이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 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정상들이 함께 박수를 보내면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해 IOC에서 협조를 약속한 만큼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 사. G20 정상회의 세션Ⅳ 문재인 대통령 발언(2017-07-08)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7년 UN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들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G20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아. 국정기획자문위 모두 발언 전문(2017-07-19)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자. ‘G-200,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다짐대회(2017-07-24)

문 대통령은 “북한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반대로 비관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는 문을 활짝 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북한이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다”며 “이제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을 하고 2022년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이렇게 한·중·일에서 연이어 열리는 동계·하계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를 강고하게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차.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 □ 과제목표

-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

#### □ 주요내용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물류·교통벨트: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 환경·관광벨트: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 (남북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 □ 기대효과

-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제고
-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

##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 □ 과제목표

-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

□ 주요내용

-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
- (인도 지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 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상봉정례화·교류 제도화 추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
- (탈북민 정착 지원) 지원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추진,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 활성화 노력

□ 기대효과

-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 탈북민의 자립·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과제목표

-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
-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통한 민간·지자체 자율성 확대

- 남북 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인 기반 확충

□ 주요내용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 사업 등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참가 지원 등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추진
- (교류협력 활성화) 학술·역사·언어·교육·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 (거버넌스 구축)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 추진
- (제도 개선) 남북 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 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 강화

□ 기대효과

- 교류협력 재개·활성화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기여
-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접근성 강화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통일연구원 발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
- 나)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9, E-Mail: books@kinu.or.kr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 표는 필수항목입니다.

신청자 성명* (입금자가 다를 경우 별도 표기)		소 속*	
간 행 물* 받 을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 주소 기입必		
연 락 처*	TEL		이메일
이메일 서비스	수신 ( )		수신거부 ( )
회 원 구 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일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연구원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도서회원 가입 신청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회원구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입금일로부터 1년  
※ 회원자격 갱신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은 1년간 연장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도서 회원 가입 및 발송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인)

※ 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보내주시시오.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도서회원 담당자앞

전화: (02)2023-8009, FAX: (02)2023-8298, E-Mail: books@kinu.or.kr

※ 온라인 신한은행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www.kinu.or.kr



##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 교류협력 추진 방안

**KINU** 통일연구원



비매물 / 무료

9 3 3 4 0

9 788984 798854

ISBN 978-89-8479-885-4